



국민의힘 대덕구 제3선거구

# 이 용 기 의원



“위원회의 통·폐합, 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사와 필요 시 과감한 구조조정,  
운영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 이 용 기 의 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3선거구 의원 이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민간위탁 관련해 시정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십시오.

대전광역시 위원회 및 위원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는 2018년 182개 위원회에서 2022년에는 231개 위원회로 49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개최는 2021년도의 경우 814회에 그쳐 일반적 단순 위원회별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에 해당하나 이는 48%에 이르는 서면회의를 포함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문제는 회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35개 위원회나 되며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5개 위원회나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할당된 예산 11억 1,100만 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6억 6,700만 원에 불과하여 불용예산이 40%에 이릅니다.

활동하는 위원 수를 살펴보면 중복 위원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편성 수는 3,952명으로

위원회별 인원수는 17명에 이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내용은 연간 몇 회 미만 개최 위원회가 몇 개이고 유사·중복기능 위원회가 몇 개이며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몇 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며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줄이려 해도 관계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등의 반복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근거에 의해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중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제1항 예를 들어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중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개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정권교체 시마다 정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정비를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특히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원회 정비는 정비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위원회 정비계획이 반복되는 이유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책임자가 교체되더라도 정상적인 위원회 기능수행이 변함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비와 불필요한 법령, 조례 남설 방지 등 기본적인 정비를 전제로 하여 위원회 정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편성을 위해 유형별 전문가풀 관리시스템 즉, 위원회 인재은행 개념으로 위원, 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과 실·국별 위원회 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고 규모는 상임위원회별 250명 내외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위원 총수 3,952명을 1천 명 내외로 정예화시켜 운용하면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시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사무 또한 전문적이고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 사무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이 매우 떠들썩합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가 많고 도덕적해이가 심하며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제시하고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고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조정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편파적 위원 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우려 등 적절성 논란을 초래하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갈등 심화 등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에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독점화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경쟁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과정에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되었고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36%나 되고 관행적인 제약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위탁업무에 관련해서도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보면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임의적으로 위원을 구성 또는 편파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도 순수 민간기업보다 정부 산하단체나 사업자단체가 더 뛰어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방식의 구체성과 통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과평가관리 및 재계약 면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미흡하며 위탁기관 성과평가 공동지표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표를 봐주십시오.

공조직에서 수행할 업무를 업체를 활용하여 대용시키고 있는 대전광역시 위탁업무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2022년 8월 기준 사무위탁형 51개, 시설운영관리 28개, 수익창출형 5개 등 총 84개의 위탁업무가 있고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총괄부서에서는 연 2회, 사업부서에서는 연 1회 지도감독 및 위탁종료 전 성과평가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 예산은 연 487억 2,507만 원이나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지방채 규모가 2018년 5,961억에서 2022년 지방채 규모는 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가 2021년 6월 대비 5.9% 상승되었고 생활물가지수도 7.6% 상승되어 결국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어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영향을 받아 특히 식료품 및 외식 등 식비지출이 수입의 40%나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에 예산 집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 민간위탁업무 동의안 처리 현황을 봐주십시오.

왜 유독 8대 의회에서 위탁업무가 대폭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8대 의회에서 위탁업무가 전기에 비해 대폭 증가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신규 위탁업무 현황을 보면 위탁기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업체가 3개 업체나 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2022년도 84개 위탁업체에 할당된 예산은 487억 원입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연봉액 2,500만 원이면 2022년 민간위탁 예산 487억 원은 1,949명분에 해당됩니다.

시장님!

공조직에서 수행할 업무를 위탁업체를 활용·대용시키는 것이라면 해당되는 인원만큼 공무원 수가 감소 조정되었는지, 해당되는 인원만큼 공무원 수를 감소 조정하지 않았다면 투입되는 예산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949명에 해당되는 인원만큼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위탁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대전광역시도 민간위탁에 있어 내실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중복 사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특히 위탁근거가 없는 사무는 존재하지 않는지, 선정기준, 절차 등 근거 없이 위탁되는 경우는 없는지, 절차적 민주성과 합법성이 담보되었는지, 내부적인 방침을 법적·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해서 추진하진 않는지 등에 대한 문제와 비용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 중복된 사무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과 함께 업무의 효율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운영방식의 전환 또한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탁기간도 필요 시 5년 이내 기간에서 2년 단위로 재설정의 필요성이 없는지 재계약과 재위탁 건도 재계약 제도를 폐쇄하고 필요 시 재위탁으로 조정하고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성과평가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업무로 중대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 제가 제안드린 민간위탁 관련 조사와 필요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 운영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래는 장밋빛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장에 올해 연말 지방채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으로 우리네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 4년의 성패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무한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관하고의 연결고리 없이 주민 스스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일 것입니다.

관에서는 주민자치라는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에서 개입하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의 정상적인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정상적인 조직이란 주민자치의 기초조직으로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관의 최하조직인 동장과 통장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훌륭한 조직을 잘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을 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성의 문제가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경제활동보다 세금 귀한 줄 알면서 공직에서 봉사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항상 존경합니다.

세금은 꼭 써야 할 곳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정권교체 시마다 용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국민이 기준이 되어 합리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용기 의원님께서서는 각종 위원회 관리와 시 예산운용의 방향성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회 통폐합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계획에 관한 질문 또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 사용 필요방안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운용 방향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한 견해와 의지,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 관련 적정성 등의 조사와 필요시 과감한 구조조정, 운영방식 전환 등에 대한 방안과 계획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용기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대전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또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기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원회 통폐합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선 8기 들어 8월에 이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저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월 정비계획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018년에 182개였던 위원회가 2019년에 196개로, 2020년에는 211개로, 2021년에는 224개로, 2022년 7월까지 231개로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설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장기간 미개최나 비효율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또는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앙부처로 법령정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조례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낭비 부분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 사용 필요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원님과 함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운용 방향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셨습시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이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공약사업과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산업, 나노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우선투자할 재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약자나 소상공인 등의 지원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과감하게 종결하는 등 지출구조를 강도 높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민간위탁사업 관련 적정성은 조사와 필요 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운영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특정단체나 정치적인 악용성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해 과다지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들이 축소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센터는 지금 대대적인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상입니다.

민간위탁제도는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무를 복수의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자칫 성과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주체의 명목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철저한 성과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부터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방안을 전면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위탁을 지양하고 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을 지속할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예산을 더욱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수행의무가 있거나 시설운동을 위해 상주인력이 필요한 사무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위수탁 협약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명시하는 등 처음부터 불필요한 위탁사무가 신설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같이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의 센터 등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시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